

국회 최악 지각 개원, 갈 길도 첩첩산중

21대 임기 시작 후 47일만
통합당, 원내 대여투쟁 선언
법안소위서 '길목 막기' 우려

21대 국회가 16일 '지각 개원식'을 통해 국회의 문을 열었다. 임기 시작 후 47일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최악의 지각 개원 기록을 세웠다.

국회는 이날 개원식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여야가 국회 문은 열었지만 7월 국회는 산적한 현안에 난기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발목 잡기'가 우려되고 있다. 과거 야당 묶어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통합당은 각 상임위 법안소위 포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 권한 축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는 '입법 전쟁'이라 할 만큼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길목 막기'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동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휘발성 강한 현안에 집중해 여권을 본격 압박할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이들의 스위스 유학 등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굳혀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으로,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신중한 태도지만,

통합당은 청문회 소집과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버르고 있다.

전날 법정 출범 시한이었던 공수처 설치 문제도 본격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위헌 논란을 중점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일단 의사일정 재개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근본적 인식 차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 야당쪽 국회부의장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기초의원 7명 제명

의장단 구성 과정 '사전 경선' 당 지침 위반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당 지침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기초의원 7명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지자체 수의계약 비리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기초의원에게는 제명 또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당 지침을 어기고 의원총회 결과에 반하는 행동을 한 당 소속 기초의원 7명을 제명했다.

제명된 의원은 구례군의회 유시문·박정임·정정섭 의원, 강진군의회 위성식·윤기현 의원, 곡성군의회 윤영규 의원, 나주시의회 윤정근 의원이다. 곡성군의회 정인균·강덕구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부인한 강진군의회 문춘단·김보미 의원은 조사를 더 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흔탁과 잡음을 줄이고자 사전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먼저 결정하기로 한 중앙당 지침을 어겼

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 강진군의회의 경우 사전 경선으로 김명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본선 투표에서 위성식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사전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이승욱 의원을 뽑은 민주당 소속 구례군의원들도 본선에서는 의장에 유시문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을 점한 목포·곡성·강진 등 3곳에서는 부의장에 무소속 등 다른 당 의원이 당선됐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목포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소명을 거쳐 조만간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리심판원은 또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김양규 시의원도 제명 조처했다.

장흥에서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며 장흥군에 수십여대의 관용차량을 납품한 왕윤채 군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회 정보위원장에 민주 전해철 의원 선출

21대 국회 정보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177표 중 176표를 얻은 전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했다.

전 의원은 '친문' (친문재인) 핵심 인사로 꼽힌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마산 중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합격 후 시국사건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노 전 대통령이 대선에 뛰어들자 당시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당선을 도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이호철 전 민정수석,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문 대통령의 원조 측근 3인방을 뜻하는 '3철'로 불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리얼미터 조사…문 대통령 44.1%·민주당 35.4%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함께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 논란까지 겹쳐진 탓이다. 여권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공정 평가)는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44.1%로 '조국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 역시 4.3%포인트 하락한 35.4%를 기록했다. 미래통합당은 31.1%

로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에선 "약재가 이렇게 겹치는데 안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재선 의원)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심 악화의 저변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반영돼 있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6·17 대책 발표 후 시장의 불안정이 커진 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의 '똥뿜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이 악화 일로를 걸었다.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7·10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지만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폭등세

가 빚어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박 전 시장 사건이 터지면서 화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성추행 의혹 고소가 제기된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것을 두고 청와대 반대 청원에 5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런 민심 이반을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여론 악화가 '미니 대선급'으로 판이 커진 내년 4월 재보선 표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는 모습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의 지지율은 최근의 약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현안별로 착실하게 대응해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합당 '박원순 공세'

피소 사실 유출 경위 해명 촉구

야권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여권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특히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의 유출 경위를 둘러싼 의혹 규명이 정국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과연 성범죄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전 시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는지 하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범죄 사건에 일체의 언급이 없다"며 "페미니스트를 자처했던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은 없나"라고 공개 질의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친권 상실 부모 자녀 부양의무 배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은 16일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방치해 친권을 상실한 부모가 나중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양의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계부와 친모가 9세 딸의 목에 쇠사슬을 묶고 불에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학대 부모의 친권이 사라지더라도 학대받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 아무리 가혹한



학대를 했더라도 현행 민법상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 시대를 반영한 입법으로 불합리하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손해보험협회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